

# 신정부 정책방향과 전라북도 발전전략

ISSUE BRIEFING 2017

ISSUE  
BRIEFING  
2017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7.05.24 vol.161

[www.jthink.kr](http://www.jthink.kr)

연구진  
김동영, 김재구, 김상엽, 김수은, 김시백, 김형오  
이강진, 이통기, 이민수, 이종섭, 이지훈, 임승현  
장남정, 장세길, 조경욱, 조승현

# ISSUE BRIEFING 2017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7.05.24 vol.161

## CONTENTS

### 신정부 정책방향과 전라북도 발전전략

I. 신정부 출범과 전북의 의미	4
II. 신정부 정책방향과 시사점	
1. 신정부 정책공약	6
2. 시사점	
1) 일자리	8
2) 4차산업혁명	9
3) 지방분권	9
4) 안전	11
5) 문화관광	12
6) 복지·저출산	13
III. 전라북도 공약 및 후속대응전략	
1. 전북공약	14
2. 후속대응전략	
1) 농생명	15
2) 혁신도시	16
3) 신산업	16
4) 새만금	17
5) 문화관광	18
6) SOC	18
7) 지역현안: 군산조선소 정상화	19



9 772508 688004 01

ISSN 2508-688x

발행인: 강현직

발행처: 전북연구원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신정부 정책방향과 전라북도 발전전략

-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상적 국정시스템의 회복과 더불어 성장절벽, 인구절벽, 고용절벽이라는 3대 절벽에 의한 저성장의 뉴노멀시대 극복을 위해 4대비전 12대 약속으로 32개 분야 203개 사업을 제안
- 주된 정책기조는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마련, 신성장동력으로써 4차산업혁명대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재난재해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국민안전,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복지·저출산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전라북도는 정부의 변화된 국정기조에 맞춰 정부차원의 공공부문 일자리 컨트롤타워로 국립사회서비스공단(가칭)의 전북설립, 4차산업 창업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확대,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농생명 4차산업 전진기지육성, 서해안권 종합안전 모니터링센터 설립, 문화와 관광자원의 신성장동력화,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정책 등에 따른 재정부담완화 등을 국가에 건의 또는 국가사업화로 선제적 대응 필요
- 전라북도는 또한 지난해부터 대선공약발굴단을 운영하여 8대분야 45개의 사업을 제안하여 7개 분야 10대 과제 23개 사업이 공약으로 채택되는 등 전북발전의 계기마련
- 공약에 채택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7대 분야별 주요 대응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명칭을 국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협력과 혁신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국가농생명혁신네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관리 및 육성 필요
- 둘째,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심의기준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화금융중심지 전략을 수립하고 혁신도시에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방안 마련 필요
- 셋째, 탄소특화국가산업의 경제성 및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소소재 수요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탄소산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북 소재 탄소산업 관련 기관들의 지원 전략 수립
- 넷째, 청와대에 새만금사업 전담 부서의 설치 및 향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추진시 개발방식을 국가주도 매립으로 변경하도록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 다섯째, 전라도 새천년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예산을 2018년 예산에 반영하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해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 특별법」의 공동추진 검토
- 여섯째, 무주-대구고속도로는 정치·문화·사회적으로 온도차가 있는 전북-경북의 거리적인 우회를 줄이고 양 지역의 상생과 SOC 공급을 통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전구간 동시추진필요
- 일곱째, 조속한 시일 내 정부 공공선박펀드 및 잔여펀드를 조기에 발주하고 이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배정함으로써 군산조선소 정상화에 마중물 역할 하도록 하고 또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을 통해 해운선사의 신조 발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일조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고, 핵심 5대 클러스터의 연계, 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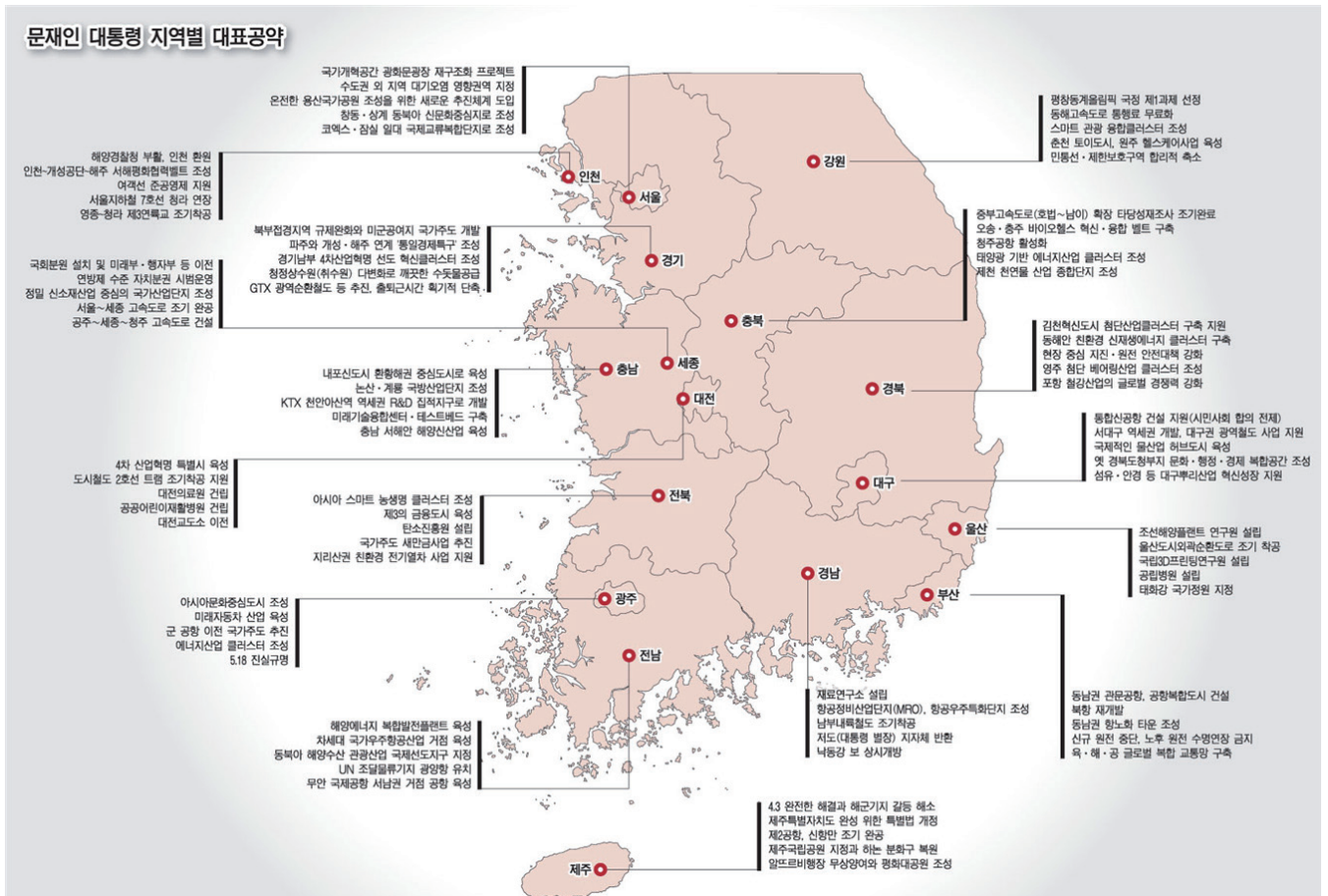
# I. 신정부 출범과 전복의 의미

- 문재인 정부는 비정상적 국정시스템의 회복과 더불어 성장절벽, 인구절벽, 고용절벽이라는 3대 절벽에 의한 저성장의 뉴노멀시대를 극복해야 하는 두 가지 선결과제를 안고 출범
-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4대 비전 12대 약속은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라북도도는 변화하는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북발전의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정부 출범에 의해 전라북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적 키워드는 국민주권, 더불어성장, 평화, 안전, 지속가능, 활력의 비전 키워드에 공정, 개혁, 민주, 인권, 일자리, 경제민주화, 성장동력, 균형발전, 출산, 노후준비, 민생, 복지, 교육, 성평등, 문화 등의 하위키워드 등이 있으며 이를 다시 분류하면 일자리, 4차산업혁명, 지방분권, 안전, 문화관광, 복지·저출산 6대 키워드로 축약될 수 있음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b>4대 비전</b>	1.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2. 공정한 대한민국 3. 민주·인권강국 대한민국	1.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2.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3.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4. 출산·노후 걱정없는 대한민국 5. 민생·복지·교육강국 대한민국	1.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2. 안전한 대한민국	1. 지속가능한 성평등한 대한민국 2.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b>12대 약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폐청산</li> <li>· 권력기관 개혁</li> <li>· 정치·선거제도 개혁</li> <li>· 경제민주화</li> <li>· 민주·인권회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창출</li> <li>·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li> <li>· 노동존중 사회 실현</li> <li>· 미래성장동력 확충</li> <li>·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li> <li>· 중소·중견기업 육성</li> <li>· 과학기술(R&amp;D) 진흥</li> <li>·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li> <li>· 살기좋은 농산어촌</li> <li>· 저출산·고령화 대책</li> <li>·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li> <li>· 주거문제 해소</li> <li>·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li> <li>· 생활비 절감</li> <li>· 국민 휴식권 보장</li> <li>·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국방</li> <li>· 국익우선 협력외교</li> <li>· 평화통일</li> <li>· 자연·사회적재해·재난 예방</li> <li>· 생활안전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한 대한민국</li> <li>· 지속가능한 대한민국</li> <li>· 문화·예술·체육</li> <li>· 언론</li> </ul>
<b>주요 정책</b>				



- 대통령선거는 국정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에 맞는 국정운영 전략과 실천과제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제시하는 국가적 차원의 의미와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전략을 취합하고 이를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의미가 있음
- 그런 점에서 각 지방정부들은 대선을 지역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정책브랜드를 설정하고 이를 국가의 주요 아젠다로 편입하여 국가사업화 하기 위해 노력
- 그 결과 안전하고 쾌적한 역사문화수도 서울특별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메가시티 경기도, 농생명 산업수도 전라북도 등 지역별 발전전략이 공약으로 선정되어 국정우선과제로 추진 될 예정



출처: 내일신문, 2017.5.12

〈그림〉 문재인 대통령 지역별 대표공약

- 각 지방정부의 지역공약들이 실제로 얼마나 국정우선순위로 선정되어 국가과제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지역공약의 국가사업으로서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논리제시와 정치적 관계설정 등의 문제해결능력에 달려 있음
- 전라북도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되기도 추진되지 못했던 과거정부를 타산지석삼아 정권 초기 국정과제화 할 수 있도록 다당구조 하에서의 지방정부와 정치권과의 공조와 지역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합의를 통해 국가사업화 논리를 제공해야 함

## II. 신정부 정책방향과 시사점

### 1. 신정부 정책공약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4대 비전, 12대 약속, 32개 분야, 203개 사업에 2천 여 개가 넘는 다양한 실천과제를 제시
- 이를 전라북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108개 사업에 달함

총계	국민이 주인			더불어 성장					평화안전		지속가능사회	
	적폐 청산	경제 민주화	민주 인권	일자리	성장 동력	균형 발전	출산 노후	민생 복지 교육	국방 외교 통일	안전	지속 가능 성평등	문화 예술 체육
108	2	1	1	5	7	21	5	19	-	16	8	23

- 각 분야별 세부사업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공약명	세부사업	
촉발력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적폐청산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 확대	
	경제민주화	문화음부즈맨제도 도입	
	민주인권	공정거래위 역할강화	
	일자리	과거사 진실규명	못 다한 과거사 진실규명 완수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확대
			추가고용 지원제도 신설
			신종년 재충전센터 설치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비정규직 처우개선	최저임금 1만원과 생활임금제 확산
		노동존중사회실현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성장동력	4차산업
			융복합 글로벌 테스트베드 기반구축 및 융복합 신산업 기반의 첨단기술산업 육성
			광역별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조성 및 물류형 드론개발 지원
			제약·바이오·의류기기 산업 육성
		사회적 경제 리더 양성	한국형 자율협력주행 스마트하이웨이 고도화
		과학기술 진흥	전문 인재 양성기관 설립 및 지역학습공동체
		지방분권 기반구축	연구개발특구, 연구단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공공연구기관 운영 효율화
균형발전			지방이양 일괄법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예산낭비사업 근절	
		주민참여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지방소비세 규모확대	
		고향기부제 도입	
		대통령이 농어업 직접 챙기기	
		쌀생산조정제 등 쌀값, 쌀농업 지키기	
출산노후		농어업 재해대책법 강화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농어업회의소 전국설치	
		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기공단지 조성	
		우리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숲을 일자리와 휴식공간으로 재창조	
		철도 공공성 강화 및 세계 3위 고속철 육성	
		혁신도시 4차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사업 확대	
	저출산 문제해결	집중 인구감소지역 지원확대	
	노후소득보장 강화	기초연금 30만원 균등지원	
	활기찬 노후생활	국가차매책임제 시행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문화복지 확대	

구분	공약명	세부사업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민생 복지 교육	맞춤형 교육비지원	무상교육 기회제공
		빈곤탈출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 운영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해결, 간병 서비스 확대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어린이 입원 진료비, 학령기 청소년 독감예방접종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완화
			의료영리화 방지 및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사회적 차별 해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청소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지원
		교육의 국가책임강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환경조성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유아기 출발선 평등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주거문제해소	공적 임대주택 매년 17만호씩 공급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지원 강화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저소득 서민에게 따뜻한 주거복지 지원		
	도시재생 뉴딜로 노후주택 지원 및 생활여건개선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	생활비 절감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경감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재난 컨트롤타워구축 및 현장조직 확대
		국민안전 제도구축	재난트라우마센터 설치
			취약특성 맞춤형 안전복지
			재난대비 시스템 강화
		국민생명 및 안전보호	안전교육 및 홍보확대
		재난으로부터 안전	지진재난 대응역량 강화
		사회적 재해·재난예방	축산방역강화
			중국 불법조업 대응 강화
			깨끗한 수산물 공급체계구축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마련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방역체계 강화		
	지역사회 아동보호시스템 구축		
	소방인력 보강	소방공무원 3교대 부족인력 총원	
		소방직장협의회 설립	
		주택화재예방을 위한 경보기 보급	
		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119구조대 추가배치	
지속가능 성평등	성평등	성평등	더불어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
			일·가족·생활의 균형 실현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여성의 건강권 보장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지속가능 성평등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비율 2030까지 20%상향
			친환경·저탄소 미래에너지 발굴
		반려동물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건강한 생명국가
		예술인 문화복지	예술인의 창조적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예술인 복지금고 지원
	문화 예술 체육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
			청년예술인을 위한 창작주거 인프라 조성 및 청년예술인 안정적 일자리 확충
		생활문화시대 개막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문화기술역량제고
		공정한 문화생태계 조성	1인창조기업, 중소제작사 정책금융제도 확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국가지원 확대
			선진적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시도 등록문화재 지정제도 도입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진흥기금 확충
			지역문화재단 운영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지역문화재생 사업 확대		
	문화도시 조성 활성화		
스포츠 복지국가 건설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체육인 복지증진과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스포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쉽표가 있는 관광복지사회	여행이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 2. 시사점

### 1) 일자리

#### ■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설치와 일자리 중심의 행정체계 확립

- 새 정부는 일자리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자리 상황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방침
  - 정부 일자리정책에 발맞추어 중장년일자리센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지역에 산재된 기관별 일자리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모니터링하고 중장기 일자리정책을 수립·지원하는 전북일자리 총괄 전담기관 설립 필요
  - 공공부문 일자리의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국립사회서비스공단(가칭)을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라북도에 유치
- 새 정부 경제, 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 고용영향평가제를 강화하여 일자리창출 항목의 예산편성과 국가 R&D정책자금, 공공조달계약, 조세/금융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정부, 공공기관 등의 핵심 성과지표화
  - 정부 정책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 시책사업의 핵심 목표를 일자리 창출효과로 하여 정부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일자리창출효과가 높은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국가사업화 추진

#### ■ 기업성장 및 신성장산업 육성

- 새 정부는 혁신 창업기업 육성과 건강한 기업생태계(스타트업 → 강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조성 및 12대 신산업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구조 재도약,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
  - 상용차 자율주행, 농업용드론, 바이오,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그동안 전북에서 추진해온 전략산업을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전라북도 전략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전북일자리창출의 원천으로 활용

시스템산업(7)	▶전기 ▶자율차 ▶스마트 ▶친환경 선박 ▶IoT가전 ▶항공 ▶드론 ▶로봇 ▶바이오 헬스 ▶프리미엄 소비자재
소재부품산업(4)	▶첨단 신소재 ▶AR·VR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에너지산업(1)	▶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 ESS, 스마트미터 등)

자료: 일자리위원회 보고서(2017. 5. 9)

#### ■ 지역특화일자리 창출 지원

-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춘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온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및 '지역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확대할 계획
  - 수립 예정인 전북지역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정부계획과 연계, 지역 산업맞춤형 사업발굴, 지역창업 특구, 일자리촉진지구 등의 선제적 발굴로 국가예산 확보 및 국가사업화

#### ■ 사회적경제 육성

- 뉴노멀 시대의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문제와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가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3법 제정 및 전담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
  - 지역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회적경제 기준 마련, 정책 추진체계 정비, 인력양성 계획 등을 준비하고, 인력양성 전담기관 설립계획 수립시 적극적으로 대응



## 2) 4차산업혁명

### ■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 스마트 한국 속의 스마트 전복으로

-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스마트코리아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민간 IoT 기반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IoT 생태계 조성,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 등의 정책을 추진 계획임
- 기간 전복이 추구한 한국 속의 한국을 지속 발전하면서 신정부 정책방향과의 맥을 같이 하기 위한 전략으로 '스마트 한국 속의 스마트 전복' 정책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발굴이 요구됨
- 동능 복합형 스마트시티(스마트 교통 서비스 등), 농촌형 스마트시티(농촌 안전 서비스 등) 등의 공공 주도의 데이터 공유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수요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실증(리빙랩) 추진

### ■ 전복에 특화된 고부가 미래형 신산업 육성 및 제조업 경쟁력 제고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AR·VR, 3D프린팅 등의 기반기술 지원 확대 전망
- 전복 특화산업인 농생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발굴(지능형 농업용 로봇, 농생명 빅데이터 등)
-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를 위해 국가 전략프로젝트(과학기술전략회의 심의·확정 사업)등과 연계 방안 모색
-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미래형 자동차, 드론, 탄소섬유, 바이오 등의 혁신 신기술, 신산업 활성화 지원 전망
- 지원 확대가 전망되는 탄소섬유의 상용화를 위해 지역 현안인 탄소산업진흥원을 조기 설립
- 군산 일대 상용차 기반을 미래형 자동차와 결합시키는 상용차 자율주행,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 산업 육성의 마중물이 될 드론기업 지속 지원(광역별 드론전용 비행장, 통제센터, 격납고 조기 확충 공약의 전복 유치), 바이오화학/소재 중심의 바이오 신기술 육성전략 마련 등이 요구됨

###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확대되는 벤처, 스타트업 지원정책 강화

- 신정부는 기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고, 기존 흩어져 있던 벤처, 스타트업 관련 부처의 업무를 일원화시켜 사업 효율성을 도모하며, 사업규모의 역시 확대 할 것으로 보임
- 도내 구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시제품제작소, 무한상상실 등 벤처, 스타트업 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필요
- 아울러 1인 제조기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공간의 조성 검토
- 혁신 창업국가로 만들기 위해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네거티브 규제 도입, 국토공간정보 등 공공 정보 무료 제공을 통해 창업 지원을 확대 할 예정
- 전복은 공간정보연구원이 소재하고 있고, 공간정보연구원과 공동으로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업 거점의 최적지임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해 관련된 사업 유치(예: 데이터 프리존 등)에 있어 선점 필요
- 새만금 등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드론 등을 일정기간 동안 자유롭게 테스트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형 테스트베드 조성 (예: 영국 규제 샌드박스)

## 3) 지방분권

### ■ 과감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의 기반 마련
- 행정서비스 질은 개선되었으나 실질적인 지방분권화가 미흡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배분도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어려운 상태

-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정된 지 69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 사고와 정책 결정으로 인해 오히려 지방자치를 방해하고 있고 지방 성장과 지역 내실화를 추진하기 어려움
-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117조와 제118조의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을 보장해야 함.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와 제118조 제2항의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개정 필요
- 현행 헌법 및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기초자치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균형화 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원리를 구현해야 함

●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을 통한 지방권한의 확대 추진

-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의 권한을 확대 추진하고 지역 친화형 사무를 발굴 및 이양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을 추진
- 중앙정부에 지방으로 이양 확정된 사무 1,587개 중 516개 사무 32.5%만이 이양이 미 추진된 상태임. 그러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시 사무와 재원이 동시에 이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립해야 함

●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및 전문성 지원 등을 통한 지방의회 기능 확대

-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 확충을 추진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를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 20%, 재정지출 부담은 국가와 지방의 비율이 60%:40%로 지방재정의 세입세출의 격차가 40%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현행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불균형을 초래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저해
- 또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은 보조율 결정권한을 통해 국가 정책사업 추진 및 경제상황 대응을 위해 지방 재원을 징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이에 따라 신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해 재정분권을 확대하고,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주 역량을 제고할 계획임
- 따라서 지방재정의 분권화를 위해서는 역진적인 세수구조인 현행 20%의 지방세 수준을 40% 수준으로 확대를 검토해야 하며,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11%에서 20~21%까지 단계별 인상을 추진해야 함

● 지방재정의 건전화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사업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 강화를 추진
- 전라북도는 재정사업평가 및 지방보조금 심의 등을 통해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외부채무 제로화 및 보통교부세 전국 최고 증가율 및 역대 최대액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집행 최우수 기관을 선정되는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음

●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추진

- 신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금을 공제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 추진할 계획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고 지방도시의 생산가능인구의 대도시 유입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세수격차 해소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실천방안 마련 필요

#### ▣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확대 및 혁신도시 시즌 2를 통한 지역상생 생태계 구축

-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확대 및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주민 권한 강화
  - 주민발의의 실질화를 위해 조례 제·개정 청구요건을 광역·기초 단위의 인구규모에 따라 세분화하고, 주민투표법 발의 주체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소환 청구요건과 투표율 기준을 완화할 계획
  - 자치단체 사업 및 정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및 국가예산 국민참여예산제 도입을 통해 지자체 및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
  - 전라북도의 지역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
- 혁신도시 시즌 2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 신 정부는 혁신도시와 이전 공공기관 및 대기업 본사의 이전 촉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혁신도시를 지능형스마트도시 육성 및 지역 학·연·산·관의 협의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조성할 구상
  - 따라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전라북도 혁신도시 신 지역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지역상생형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라북도 혁신도시 업그레이드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사업화

#### 4) 안전

##### ▣ 국가재난콘트롤 타워 기능 및 위상 강화

- 현행 국민안전처의 국가재난 콘트롤 타워 역할을 대통령과 청와대로 이관함으로써 콘트롤 타워의 위상을 크게 강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기조를 천명함
  - 청와대의 위기관리기능강화에 부합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역량 및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통합방재센터 설립, 안전복지공공서비스 확대,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드론 및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의 차세대 재난대응체계 도입 적극 추진

##### ▣ 국민의 생명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국가재난안전체계 구축

- 국가재난안전의 핵심인 소방과 해양경비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의 독립을 추진하고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하여 화재예방과 대응, 응급구조, 해양안전을 한층 강화함
  - 지역안전지수 지속 개선을 위한 전국의 4대 취약분야(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자살)에 대한 안전약자 맞춤형 복지정책 마련, 시설물 안전관리와 지진대비 내진보강 등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강화, 소방력 강화를 위한 예산확충과 함께 소방관의 처우개선 지속 추진

##### ▣ 강력하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특별기구 설치, 환경기준 강화, 한중 정상외교 주요외제로 격상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 및 추진
  -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및 모니터링 강화,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내부 배출원 저감사업 지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확대 등 지자체 차원의 대책 추진 필요
  - 자연재해 피해가 큰 서해안권에 지진, 미세먼지, 방사능 누출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서해안권 종합안전 모니터링 센터 건립제안 필요

##### ▣ 유해화학물질 피해 근절을 위한 관리 강화

- 유해물질 알권리 특별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조직 보강, 인체 위해성 통합평가 시행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추진
  - 유해화학물질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사고대응 체계 강화 등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지자체 역량 강화 필요

## 5) 문화관광

### ■ 생활문화 중심에서 예술인복지로 정책의 무게중심 이동

- 박근혜정부 문화·예술정책의 핵심이 생활문화이었다면, 새정부의 핵심키워드는 예술인복지와 창작 진흥,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 청년예술인, 동네생활문화 등이 강조
- 수립 중인 전북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정부계획과 연계, 지역예술인 맞춤형 사업 발굴. 청년예술인 지원, 유희공간의 생활문화공간화 등의 선제적 사업발굴로 국가사업화

### ■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융합콘텐츠 발굴 및 콘텐츠R&D 강조

- 콘텐츠시장 확대 중심에서 공정한 생태계 구축으로 전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융합형 콘텐츠 발굴·육성과 문화콘텐츠의 신성장동력산업화 및 R&D의 확대
- 1인 창조기업, 중소제작사 등의 지원확대 방향에 대한 전북차원의 대응방안 강구(정책전환에 따른 전북기업의 이익창출 방안 마련). 전북 전략분야의 R&D사업 발굴·제안

### ■ 지역문화의 활용과 문화균형발전 기초 유지 및 확대

-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국가지원 확대, 근·현대 문화유산(특히 독립유산)의 보존·활용 강조. 관주도 문화재생에서 민간의 문화재생 지원. 문화도시 법적지정과 지원 전망
- 근대 외 현대 문화유산(독립유산)까지 확장하여 발굴 및 재생사업 구상. 민간주도의 유희공간 리모델링사업 발굴. 타 도시에 앞서 문화도시 법적지정을 위한 도·시군 협력

### ■ 관광복지사회 실현과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

- 여행의 저변확대를 위해 휴가지원제 도입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맞춤형 생애주기별 여행지원 및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 기존 중산층 타깃 유치 정책에서 근로자 및 가족, 노인 등을 위한 배려정책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연령별 탄력적 요금제 도입과 개별여행시대에 부응한 관광상품 개발

### ■ 4차 산업혁명 대비 융합관광산업과 양질의 관광일자리 창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한 융합관광산업 육성과 관광콘텐츠 관련 기업의 고도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하며 지역관광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양질의 관광일자리 창출
- 토탈관광사업을 기존 농어촌, 문화, 생태 중심에서 의료관광, 산업관광 등 산업중심으로 전환하며 대학 간 연계를 통해 우수한 양질의 관광인력 확보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매진

## 6) 복지·저출산

### ■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 소득하위 70%까지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80만개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지원체계 구축 추진
- 노인빈곤율의 증가로 인한 불안한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확대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지만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전라북도에서는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여건과 노인인구의 비율에 따른 국고보조율의 조정을 통해 지역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요구 필요

### ■ 국가치매 관리제 도입을 통한 공적 돌봄체계 구축

- 국가치매관리제 도입을 통한 치매노인에 대한 공적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책임병원 지정 및 치매진료비의 건강보험적용 확대를 통해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추진
- 국가중심의 치매대응 인프라 확대에 대응하여 치매노인 진료 및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지원센터, 치매안심병원, 치매책임병원, 치매환자 단기 및 주간보호시설 등 주요 진단 및 치료시설의 공급량에 대한 수요 파악 및 시설 우선 설치 지역 선정·관리 등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 필요

### ■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 운영을 통한 탈빈곤 강화

- 저소득 빈곤계층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창출을 위해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저소득 빈곤가구의 빈곤탈출 유인하고 광역지자체별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치하여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추진
- 생애주기별로 도입되는 아동수당(0세~5세), 청년구직촉진수당(만 18세~34세), 장애연금 확대(10만원 인상)에 따른 전라북도의 수혜대상 분석과 그에 따른 재정추계를 통해 빈곤율이 높은 전라북도의 적정 재정부담 수준을 파악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
- 광역단위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에 대응하여 전라북도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가능분야를 검토하여 전라북도의 높은 복지수요가 국가주도의 공공부문의 일자리에 흡수될 수 있도록 유인

### ■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일·가정양립 지원 확대

- 저출산 문제를 청년층의 결혼기피와 기혼부부의 자녀양육·교육 비용부담 및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보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일자리, 주거, 일-가정양립, 교육비용 부담경감, 안심보육 등 종합대책을 강조
- 전북의 저출산은 가임기 청년층(25세~34세)의 역외유출 심각성에 기인하므로 청년층의 미취업과 고용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활성화하고 기혼여성의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공보육 확대 및 초등돌봄(12시간 완전돌봄) 현실화를 위한 대응필요

### ■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경력단절여성·성별임금격차 해소 강조

- OECD 최하위인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성 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관련 5개년 계획수립,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에서 정원 3~5%를 청년고용 및 여성청년할당제를 매년 추진하도록 함. 경력단절여성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채용지원금 확대
- 청년과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여성노인 비율이 높은 전북의 현실을 반영하여 대상별 취업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일자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전북 여성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필요

### ■ 실질적 성 평등사회를 위한 정책추진 체계 구축

- 한국은 성별격차지수가 144개국 중 116위(2016년)로 세계 최하위 수준임. 저출산·고령사회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대표성과 정부정책의 성 주류화 기반 구축 등의 특단의 조치 필요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적극 시행하고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추진. 정책의 성 주류화 기반을 위해 성 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배치 등 전북의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재정비 등을 통해 성 주류화 기반을 조성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를 통해 양성평등한 정책 확산

### III. 전라북도 공약 및 후속대응전략

#### 1. 전북공약

- 전라북도 정책공약의 비전은 ‘전북을 농생명산업수도로 조성’ 또는 ‘전북을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조성’ 등 농생명관련 특화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설정
- 세부적인 사업에 앞서 크게 10대 과제를 설정하였는데 10대 과제는 전북지역 단독사업 8개와 전 북과 전남, 전북과 경북 광역연계사업 2개로 구성되어 있음
  -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육성
  -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 탄소소재산업과 안전융합복합제품산업 등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지원
  -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치유농업원 조성 지원
  - 전라도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특별법 제정
  -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
- 문재인 1번가를 통해 제시한 전라북도 공약을 분야별로 재구성하면 농생명, 혁신도시, 신산업, 새 만금, 지역연안, 문화관광, SOC 7개 분야에 10대 과제 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분야	10대 과제	23개 세부사업
농생명	1.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육성·5대 농생명 클러스터 : 익산(식품), 김제(종자, ICT농기계), 정읍(미생물), 새만금(첨단농업)	○ 5대 농생명클러스터 육성 (※문재인1번가)
		1.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 육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산업단지 조성, 국제농식품비즈니스센터 건립
		2. 스마트농기계 핵심부품 및 농기계품질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혁신 도시	2.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3. 농생명 청년창업특구 조성
		○국민연금기금+농업생명산업의 금융거점 육성 (※문재인1번가)
		4. 제3의 금융도시 육성
신산업	3. 탄소소재산업과 안전융합복합제품 산업 등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5. 연기금 연계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농생명특화 금융산업 육성
		6.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탄소산업 등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문재인1번가)
새만금	4.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7. 탄소밸리 조성을 통한 신소재산업 육성 -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8. 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9. ICT융복합 헬스케어산업 비즈니스벨트 조성
		○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으로 조성 (※문재인1번가)
		10. 청와대 새만금사업 전담부서 설치
		11. 공공주도 용지매립 추진
		12. 국제공항
		13. 신행만과 배후단지 조성
		14. 물류교통망 등 기본인프라 구축
		15. 지역업체 참여확대 인센티브 제공

지역 현안	5. 공공선박 발주 · 금융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16.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 공공선박 발주 확대, 노후선박 교체지원, 선박펀드 지원
문화 관광	6.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지원	17.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지원
	7.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치유농업원 조성 지원	18.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지원
	8.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특별법」 제정	19. 국립치유농업원 조성 지원
	9.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조성	20. 전라도새천년공원 조성
SOC	10.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	21.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특별법” 제정
		22.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조성 - 6개시군(정읍,순창,고창,부안,담양,장성)일대
		23.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

## 2 후속대응전략

### 1) 농생명

#### 4차 산업혁명 기반 농생명산업 육성: 국가전략기지 도입 촉구

- 농생명 산업의 글로벌 경쟁우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수준과 혁신클러스터 구축 여부가 판가름할 것임. 국가전략기지가 구축된다면 농생명산업 경쟁력은 제고될 것임. 전북에는 이미 관련 5대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국가전략기지로 최적지임
- 전북에는 연구개발(R&D)부터 생산 · 가공 · 제조까지 이어지는 농생명 가치사슬이 구축되고 있음. 핵심 5대 클러스터가 역할을 하고 있고, 각 클러스터를 연계하여 상생협력 체계를 갖추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핵심 5대 클러스터 : 농생명 혁신도시(R&D), 새만금 농생명용지(첨단농업), 국가식품클러스터(식품), 민간육종단지(종자), 농기계클러스터(CT농기계), 미생물클러스터(미생물)
-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명칭을 국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협력과 혁신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국가농생명혁신네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관리 및 육성 필요
- 국가농생명혁신네트워크센터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고, 핵심 5대 클러스터의 연계, 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 농생명산업 5대 클러스터 강화 전략: 정부 정책 · 추진계획 반영

- 농생명 혁신도시 : 스마트 농생명 제2혁신도시 조성(한식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식품안전정보원 등 이전 추진, 첨단 농생명 창업단지 조성, 스마트팜 구축 등)
- 새만금 농생명용지 : 새만금 농생명용지 계획 완공(2020년까지 전 공구 조성완료)
- 국가식품클러스터 : 2단계 산업단지 조기 조성(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종합계획(MP)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 정상추진 요청, 수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농식품비즈니스센터 추진)
- 민간육종단지, 농기계클러스터 : 민간육종단지 확장사업 추진, 농자재유통단지 조성
- 미생물클러스터 : 국가동물의약품 글로벌복합단지 조성, 장내 유용미생물 산업육성(한국형 대변은행), 천연첨가물센터구축사업 추진

#### 농생명산업 창업, 창농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일자리위원회 핵심 아젠다로 추진

- 농산업은 첨단농업기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농업인력의 고령화로 기술수용성은 낮음. 이에 따라 청년 농업인력 유입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고, 청년의 농산업 창업, 창농 육성 방안이 요청되는 시점임. 따라서 농업인력의 수요와 청년 일자리의 공급을 연결하는 국가적 전략이 추진되어야 함
- 우선, 농업 관련 대학의 졸업생들이 농업부문으로 유입도록 창업, 창농정책 강화
- 농생명산업 청년 창업창농은 정부의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음. 따라서 일자리정책의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일자리위원회가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 국가일자리위원회의 핵심 아젠다로 선정되도록 추진 필요

- 핵심 아젠다 : 농생명 청년창업특구 조성 및 육성법 제정(청년창업특구지정, 청년창업기금 조성 등), 청년창업협업농장 조성, 청년창업농벤처단지 조성
- 전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다음의 선결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생명 청년 창업 실태 및 애로사항 파악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청년창업특구의 입지 선정, 부처별 역할 배분, 전라북도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

## 2) 혁신도시

### ■ 제3 금융중심지 조성위한 지정요건 충족 대응책 마련

-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요건 충족 기반마련
- '09년 금융중심지 지정시 서울과 부산이 선정되고 인천, 고양, 제주가 탈락한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 지정 논의가 개시될 때 전라북도는 '09년 미 선정된 지자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경쟁력 확보 위한 금융 인프라 조속히 조성 필요
- 심의기준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화금융중심지 전략을 수립하고 혁신도시에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방안 마련 필요
-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에 대한 전략적 접근
- 현재 금융위에서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나 단기적 측면에서 기본구상안 마련 시점에 있는 전북으로서는 지정 여건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음
- 금융타운 연차적 목표를 설정하여 금융중심지 심의기준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는 시점에서 금융 위 계획이 발표되는 것이 전북의 최상의 시나리오이며 금융중심지 조성여건을 조속히 충족하는 노력 필요

### ■ 연기금 연계산업 육성 및 농생명 특화 금융산업 육성 기반 마련

- 금융산업 육성 기반 마련위한 금융타운 조기 조성
- 전북 혁신도시에 특화금융 산업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연기금 연계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농생명 특화 금융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 중
-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도시에 조성하는 금융타운은 사무공간, 교육/연구공간, 회의 및 전시시설을 갖추고 금융관련 기관의 집적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목표로 조성
- 금융센터 국비확보 전략 수립
- 금융센터 조성에 필요한 국비 2500억원 확보가 금융센터 건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센터 조성사업의 국비확보 논리 보강과 더불어 도,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한 관련부처 설득 전략 마련 필요

### ■ 연기금 전문대학 설립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연기금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인력양성 시스템 지속적 추진
- 현재 전북대학교와 국민연금공단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금융전문인력양성사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연기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연기금 전문대학설립 필요
- 연기금전문대학 설립 근거 마련 필요
- 연기금전문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복지부 연금법을 개정 또는 조항의 신설 필요
- 국민연금법 제27조의2(국민연금연구원)조항 개정 또는 동법 제27조의3에 연기금전문대학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모색
- 이와 더불어 교육부 전문대학원 제도개선 필요하며 특히 고등교육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에 대한 협의 필요

## 3) 신산업

### ■ 탄소산업육성법 개정 등 탄소산업 성장 기반 마련

-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필요
- 현재 탄소산업육성법에는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정시 이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설립을 추진해야 함



● 탄소산업진흥원 유치를 위한 전문가 중심 TF 구성 필요

- 탄소산업진흥원과 유사한 성격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경우를 2008년 관련법이 최초 입법된 이후 2009년 기본계획 수립, 2010년 법인 등기, 2014년 신청사 완공 등 입법 이후 신청사 입주까지 6년이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경우 당초 입지적 우위가 높은 안산이 유력하였으나, 정치적 영향력으로 대구로 최종 선정된 사례를 볼 때, 탄소산업진흥원 역시 경북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서 상대적 경쟁력 우위 논리를 만들어 유치 경쟁에서 선점해야 함

● 탄소소재 수요산업의 발굴 및 개척 필요

- 지금까지 탄소소재의 기술력 확보 차원의 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수요산업의 부족으로 탄소소재 산업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탄소특화국가산업의 경제성 및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소소재 수요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탄소산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북 소재 탄소산업 관련 기관들의 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 필요

● 경제성 확보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중요 변수로 작용

- 탄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작년에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하지 못하고 올해 다시 재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 대선 공약사업으로 제시된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ICT 융복합 헬스케어산업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 전라북도의 상대적으로 작은 산업 규모로 인해 이들 사업의 경제성 확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의 수요를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 내용 보강이 필요함

● 사업의 정책적 당위성 강조

- 현재 수요가 없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미래 트렌드의 주요 키워드인 안전, 헬스케어, ICT를 대상으로 신산업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전라북도의 확고한 사업추진의지를 보여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함

#### 4) 새만금

■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지속 요구

- 다부처 사업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필요로 하는 새만금사업에 있어 청와대에 새만금사업 전담 부서의 설치는 안정적이고 계획적 사업추진의 필수 조건
- 정책토론회 등 새만금 전담 비서관 설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당위성 확보를 바탕으로 대통령 공약 이행 요구
-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안) 마련 및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필요
- 지역기업의 안정적 참여(30% 이상)를 위해 기재부장관 고시사업 지정 및 턴키심사 기준에 지역기업 참여 배점 적용 우선 추진

■ 새만금 기본계획(MP) 등 관련 계획 변경을 통한 명시화

- 향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추진시 개발방식을 국가주도 매립으로 변경하도록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 내부용지 매립을 위한 추진로드맵 및 단계별 자원투자계획 수립을 통해 안정적 자원확보에 중요하게 작용 가능
- 접안시설(부두) 규모 확대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하여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변경 추진
-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미래 항만수요를 입증하는 논리 개발 및 적극 활용

■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 국제공항 건설 신속추진 당위성 마련을 위하여 2018년 “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추진 국가 예산(10억원) 확보 필요
- 공항건설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추진에 5~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새만금 내부개발, 세계잼버

- 리 대회 개최, 해외 투자유치 등 장애요인 발생 우려
- 본격적인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 신항만,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동시 준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정 국가예산 우선배정 필요
- 중요 투자요인인 접근성, 편리한 유통체계 등의 확립을 위해선 육해공 기본 SOC 우선 구축 시급
- 새만금 광역연계 인프라인 새만금-대야 철도, 동부내륙국도, 국도77호선 연계 도로망 추진 필요

## 5) 문화관광

### ■ 천년의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글로벌 관광거점도시로 육성

- 전라도 새천년 공원은 전라도의 천년 역사가 지방자치의 역사이자 신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한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역발전 그랜드 디자인의 출발로서 의미를 가짐
- 2018년이 전라도 천년이 되는 해 임을 감안하여 실시설계예산으로 10억원을 2018년 예산에 반영토록 건의 필요
- 전주시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천년역사 정립·재창조, 문화유산 거점구축, 전통문화기반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안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문화특별자치시'를 전주에 설치하는 「전주특별자치시 설치특별법」을 추진
- 참여정부가 수립한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완결이라는 목적에서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특별법」의 공동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 휴양·치유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관광복지사회 실현

- 국토균형개발과 장기체류 산림치유 수요충족을 위해 국토 동남권에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원(경북 영주)에 이어 서남권 '국립산림치유원 조성(전북 진안)'이 필요함
- 경북 영주 국립산림치유원과 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도의 입장을 고려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함
- 원 기구가 필요함
- 남원 가족자원센터 이전부지는 기존 축산관련 인프라 활용 치유농업 육성의 최적지
- 치유농업 지원 컨트롤타입인 국립치유농업 설립과 치유농업의 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대규모 실증단지 국가사업으로 추진

### ■ 휴양레저체험자원의 광역 연계, 전북·전남 상생 프로젝트 추진

-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은 전북·전남 '상생공약'으로 노령산맥 시·군의 비교우위 자원을 연계 활용한 광역차원의 종합적인 국민 건강프로젝트임
- 노령산맥 시·군의 우수한 산림문화 및 건강, 체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및 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북·전남의 상생협력을 도모함
- 다 부처사업으로 2017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를 통한 사업별 국가 예산 확보

### ■ 국립공원 1호 지리산 산악관광 활성화: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내 자동차 운행에 따른 로드킬, 자연훼손 등을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리산 전기열차 도입을 계획하였음
- 그러나, 전기열차 도입 사업은 단순히 대체교통 수단의 관점이 아닌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따라서, 지속적인 실용화 기술개발과 함께 국비확보를 위해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이 아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함

## 6) SOC

### ■ 전북-경북 사업 구간의 동시 건설

- 국가 간선 축 7×9(Seven by Nine)축에서 동서3축(새만금~포항) 구간의 완전한 연결을 위해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가 동시 건설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강력한 사업 조정의지가 필요
- 무주~성주(추가검토사업 60.2km, 20,184억원), 성주~대구(중점추진사업, 25.0km, 8,696억원)

- 무주~성주 구간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의 경제·교통·물류 중심축이 단절이 지속되므로 무주~성주 구간도 중점추진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구간 동시 추진이 필요

#### ■ 국민 통합의 길

- 현재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무주~대구 구간 전체가 아닌 성주~대구 일부 구간만 2017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
  -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에 추가검토사업 반영, 일부구간 예타 시행 예정
- 정치·문화·사회적으로 온도차가 있는 전북-경북의 거리적인 우회를 줄이는 무주-대구고속도로의 전구간 완성으로, 양 지역의 상생을 기대할 수 있으며 SOC 차원에서 국민 통합의 길이라는 의미가 있음
  - 전북-경북 전국적으로 우회율이 가장 큰 지역, 국민 대통합 차원 고속도로 조기 건설

#### ■ 지역사업이 아닌 국가핵심교통연계사업으로 추진

- '전국적 통행비율'이 무주-대구 고속도로의 경우 88% 추정돼 지역 숙원 사업이 아닌 국가핵심사업으로 전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 필요
  - 국가교통DB 기종점 데이터를 특정링크분석(Select Link Analysis) 통해 분석
- 열악한 동서간의 교통망이 확보된다면 충분한 유발수요가 발생하므로 전북과 경북간의 연계SOC를 우선공급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전략 필요

#### ■ 유일한 동서 철도 단절 구간, 전주-김천도 시급

- 최근 새만금 개발의 본격화, 식품·관광 산업의 재조명, 농·생명산업 육성 등으로 전라북도는 국가 신성장동력 핵심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기반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고 경북 역시 동서교통망의 부재로 중국 물적 교류 등에서 난항
  - 새만금 신항만-포항을 잇는 동서 횡단 철도망 완성 필요
- 타 광역지자체의 경우 연결되는 철도망이 있지만 유일한 광역지자체간 미연결 구간 전북-경북 구간의 전주-김천 철도의 조속 사업 추진 필요
  - 전주-김천 철도(108km, 3조 2,970억원), 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사업

## 7) 지역현안 : 군산조선소 정상화

#### ■ 공공선박펀드 조기 발주 및 군산조선소 우선배정 촉구

- 정부공공선박펀드 및 잔여펀드(1.6조원)의 조기발주를 통해 신규물량을 군산조선소 배정 촉구
  - 현대중공업에서 선박 신규수주 실적 악화에 따라 군산조선소 일시 가동중단을 발표한 상태(5월4일)로 7월 도크가동 중단이 현실화 될 때 군산조선소 직원의 유출, 지역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조속한 시일 내 정부 공공선박펀드 및 잔여펀드를 조기에 발주하고 이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배정함으로써 군산조선소 정상화에 마중물 역할 하도록 함
  - 또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을 통해 해운선사의 신조 발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일조

#### ■ 도, 군산시, 정치권과 공조를 통한 새정부와 현대중공업 지속 설득

- 정치권과 공조를 통한 새정부, 현대중공업 설득 전략 마련
  - 군산조선소를 정상화하기 위해 1인 릴레이 시위, 울산현대중공업 본사 방문, 대규모 도민 궐기대회, 존치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은 상황
  - 새정부에 지난 2월12일 전북기자협회 초청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조선산업의 경기회복 때 까지 최소한의 물량이라도 배정받아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유지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현대중공업과 긴밀히 협의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새정부에 '군산조선소 정상화 노력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도정의 공동대응과 더불어 중앙부처의 업무보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대응 필요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쭈로 1696 (효자동3가 1052-1)  
대표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